

統一情勢分析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2004. 3

여인곤(국제관계연구실장)

통일연구원

- 목 차 -

I. 문제 제기	1
II. 대선 결과와 평가	2
1. 대선 결과	2
2. 대선 평가	4
가. 푸틴의 재집권 배경	4
나. 문제점	10
III. 푸틴 집권 2기의 대내외정책 전망	13
1. 대내정책 전망	13
2. 대외정책 전망	15
IV. 정책적 고려사항	18

I. 문제 제기

- 구소련 붕괴(1991. 12)이후 옐친 대통령 지도 하의 러시아는 약 8년간 급속한 체제전환에 따른 보혁간 충돌과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어 왔음.
 - 민주헌법에 따라서 재선(1996. 7. 3)된 옐친 대통령은 푸틴 총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임기만료 전에 전격 사임(1999. 12. 31)함.
 - 푸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되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2000. 3. 26)이 실시됨.

- 러시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젊고 강력한 지도자 푸틴(1952년생)은 정치, 경제, 안보·군사, 외교 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국정을 수행하여 제4대 대선(2004. 3. 14)에서 재선되었음.

- 러시아는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집권 2기 동안 추진될 대내외정책은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푸틴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추진하여 한·러 정상회담(2001. 2, 서울)과 북·러 정상회담(2000. 7, 평양; 2001. 8, 모스크바; 2002. 8, 블라디보스톡)을 개최하였음.

- 본 보고서는 러시아 제4대 대선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푸틴 대통령 집권 2기의 대내외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II. 대선 결과와 평가

1. 대선결과

- 2004년 3월 14일 실시된 제4대 러시아 대선에는 현직 대통령인 푸틴(Vladimir Putin)을 포함한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음.
 - 국가두마(연방하원)의원 출신으로는 공산당의 하리토노프(Nikolai Kharitonov, 55세)와 무소속 글라지예프(Sergei Glazyev, 43세) 및 일본계 여성으로서 부의장을 역임한 무소속 하카마다(Irina Khakamada, 48세)
 - 연방협의회(연방상원) 의장 미로노프(Sergei Mironov, 51세)
 - 민족주의자 지리노프스키(Zhirinovsky) 자민당의 말리쉬킨(Oleg Malyshkin, 52세)

-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선거캠페인을 하지 않고 안정되고 경험을 가진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였음.
 - 대선 이전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60~70%를 기록함.
 - 푸틴 대통령 측은 소련 붕괴(1991년 말)이후 지속된 정치적, 사회적 혼돈에 의해 상처받았던 국민들에 호소한다는 선거전략을 수행함.

- 푸틴 대통령은 투표참여율 과반수 미달의 방지와 자신의 국정장악력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투표참여를 희망하였음.
 - 그는 TV 연설(3. 11)에서 “투표는 조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
 - 종교 지도자들도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촉구함.

-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TsIK)는 러시아 전역의 9만 5천 투표소에서 실시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71.2% 득표로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잠정발표(3. 15)하였음(<표 1>).
- 총유권자 1억 900여 만 명 중 64.3%의 투표참가율을 기록함.
- 제3대 대선(2000. 3. 26) 시에는 투표참가율이 68.7%,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52.9%이었음.

<표 1> 러시아 대선후보자들의 득표율

2000. 3. 26 대선		2004. 3. 14 대선	
푸틴(Putin)	52.9 %	푸틴(Putin)	71.2 %
주가노프(Zyuganov)	29.2	하리토노프(Kharitonov)	13.7
야블린스키(Yavlinskiy)	5.8	글라지예프(Glazyev)	4.1
툴레예프(Tuleyev)	2.9	하카마다(Khakamada)	3.9
지리노프스키(Zhirinovskiy)	2.7	말리쉬킨(Malyshkin)	2.0
티토프(Titov)	1.5	미로노프(Mironov)	0.8
팜필로바(Pamfilova)	1.0	모든 후보에 반대	3.5
고보루힌(Govorukhin)	0.4		
스쿠라토프(Skuratov)	0.4		
포드베료츠킨(Pod'beryozkin)	0.1		
자브라일로프(Dzhabrailov)	0.1		
모든 후보에 반대	1.9		

주: 2004년 대선은 잠정치

출처: <http://www.electionworld.org/election/russia.htm>;
<http://www.rferl.org/specials /russianelection/article>

2. 대선 평가

가. 푸틴의 재집권 배경

○ 푸틴 대통령의 경쟁후보자는 5명이었으나 개표결과는 예상대로 그의 독주로 나타났는바, 그 원인은 푸틴의 집권 이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 강력한 지도력에 의한 정치적 안정,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1) 지속적 경제성장

○ 70% 이상의 유권자들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집권 1기 동안 러시아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임.

- 그는 엘친(Boris Yeltsin) 전임 대통령의 집권(1992~1999년)시 나타났던 경제혼란을 극복하고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음(<표 2> 참조).

- 러시아의 주요 대도시들이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음.

○ 러시아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요 수출품인 원유와 가스의 높은 국제가격, 구소련 시대와 소련 붕괴 직후의 극심한 경제침체, 루블화의 75% 평가절하(1998년)에 따른 국내생산과 수출 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음.

<표 2>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성장률	-14.5	-8.7	-12.7	-4.2	-3.5	0.8	-5.4	6.3	10.0	5.0	4.3	6.2

주: 2003년은 추정치

출처: EIU, *Country Report: Russia* (London) 분기별 자료.

○ 푸틴 대통령의 집권 1기 시 주요 정책목표는 인구 1억 4,500만 명의 1/5이 빈곤층인 러시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는바, 그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였음.

- 개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토지개혁법과 세제개혁을 시행함.
- 연금제도를 정부 부담으로부터 기업과 개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히 함.
- 국영 독점기업들을 해체하고 신흥 과두재벌(올리가르히)들에게 제약을 가함.

○ 이 결과 러시아 경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성과들이 나타났음.

- 85.7%(1999년)이었던 연 인플레이율이 13.6%(2003년 추정)로 떨어짐.
- 연방재정수지가 2000년 이후 계속 흑자임.
- 외환보유액이 85억 달러(1999년)에서 618억 달러(2003년 추정)로 급증됨.
- 국민들에 대한 봉급과 연금이 제때에 지급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선된 경제 환경에서 기업가들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됨.
-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을 두 단계 올려 투자적격 등급인 'Baa3'로 상향 조정함(2003. 10).

(2) 정치적 안정

- 푸틴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개혁정책을 수행하여 소련 붕괴 이후 약 8년간 엘친 대통령 당시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정치를 안정시켰음.
 - 이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 또 다른 이유임.

- 푸틴 대통령은 제1기 취임 직후 권력의 중앙집권화에 착수하였음.
 - 89개 지방을 7개 연방지구로 구분하여 각 연방지구에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친정부의 「단합당」과 중도파 「조국-전 러시아당」을 통합하여 거대 여당인 「러시아단합당」을 창당(2001년)함.

- 제4대 국가두마 선거(2003. 12. 7) 결과는 친여정당들에게 입법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원활히 추진하였음.
 - 엘친 대통령 시대에는 「공산당」등 좌파와 「자민당」등 극우민족주의 정당이 국가두마를 장악하였음.
 - 제4대 국가두마 선거의 정당비례(225석)에서 「러시아단합당」이 37.6%(120석), 「공산당」12.6%(40석), 「자민당」이 11.5%(36석), 「모국-민족애국연합」 9.0%(29석)을 각각 차지하였음.
 - 지역선거구(225석)를 포함한 전체 의석분포에서는 친여개혁 세력(「러시아단합당」, 「모국-민족애국연합」, 「야블로코·러시아민주당」, 「우파연합」)이 59%, 좌파·극우민족주의 세력(「공산당」, 「농업당」, 「자민당」)이 20%, 중도·무소속·소수정당 세력이 2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러시아 연방하원(국가두마)의 정당별 의석수

정당명	1993년		1995년		1999년		2003년	
	전체 의석수	정당 비례 (%)	전체 의석수	정당 비례 (%)	전체 의석수	정당 비례 (%)	전체 의석수	정당 비례 (%)
러시아단합당 (ER)							222	37.6
러시아연방공산당 (KPRF)	42	12.4	157	22.3	113	24.3	52	12.6
러시아자민당 (LDPR)	64	22.9	51	11.2	17	6.0	36	11.5
모국·민족애국연합 (NPS)							37	9.0
야블로코·러시아민주당 (JABLOKO)	27	7.9	45	6.9	20	6.0	4	4.3
우파연합(SPS)	62	15.5	9	3.9	29	8.6	3	4.0
러시아농업당(APR)	38	8.0	20	3.8			2	3.6
지역간 운동통합 (MEDVED)					73	23.2		
조국·진러시아(OVR)					68	12.1		
여성당(ZR)	23	8.1	3	4.6		2.1		
우리집러시아당(NDR)			55	10.1	7	1.2		
러시아통합과 조화당 (PRES)	22	6.7	1	0.4				
러시아민주당 (DPR)	15	5.5						
무소속	135		77		105		68	
기타	16	13.0	32	35.8	9	16.5	23	17.4
계	450		450		450		450	

주 1): 정당비례득표율 5%이상 정당만 의석을 배분받음.

주 2): 1993년 6석, 1999년 9석, 2003년 3석은 공석

출처: <http://www.parties-and-elections.de/russia2.html>

- 푸틴 대통령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경유착을 통해 정계 및 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두재벌들을 제거하였음.
 - 석유재벌 베레조프스키(Boris Berezovsky)는 영국으로, 금융·언론 재벌 구신스키(Vladimir Gusinsky)는 이스라엘로 각각 망명하였고, 석유기업 유코스(Yukos) 사장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는 전격 구속되었음.
- 푸틴 대통령은 재선 확정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선 직전에 경제개혁파와 구「국가보안위원회」(KGB) 강경파로 구성되는 개각을 단행하여 개혁정책 지속과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 보였음.
 - 카시아노프(Mikhail Kasyanov) 총리 등 친엘친 각료들을 최종적으로 퇴진시키고, 통상부 장관과 주유럽연합(EU) 대사를 역임한 프라드코프(Mikhail Fradkov)를 신임총리로 임명함.
 - 6개의 부총리직을 1개로 축소하고 미 하바드 대학교에서 수학한 경제학자 주코프(Alexander Zhukov)를 부총리에 임명함.
 - 30개 정부부처를 17개로 축소하는 한편, ‘초강국 러시아’를 주장하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주유엔 대사 라브로프(Sergey Lavrov)를 외무장관에 임명함.

(3) 국민들의 신뢰

-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는 그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재선되는 데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일부 국민들은 그를 ‘좋은 황제’(good tsar) 또는 ‘친절한 황제’(kind tsar)로 칭하고 있음.

- 러시아 국민들의 이와 같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건강이 좋지 않던 옐친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푸틴 대통령은 훨씬 더 젊고 활력적으로 국정을 수행함.
 - 전체 인구 중 1/5이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푸틴 대통령 집권 하에 약간 씩 개선되어 왔음.
 - 옐친 시대의 혼란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안정과 질서가 더 이루어짐.
 - 푸틴 대통령이 다시 지도자가 된다면 러시아가 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이 국민들에게 있음(<표 4> 참조).

<표 4> 푸틴 인기의 원인

그의 실질적 성과와 업적	22 %
향후 성공하리라는 희망	32 %
그의 개인적 전문적 능력	22 %
더 나은 자가 없음	21 %
응답 곤란	4 %

출처: VTsIOM opinion poll, January 2004

- 국정을 열심히 수행한 푸틴 대통령은 체첸에서의 분쟁 지속 및 범죄와 부패 척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존경과 개인숭배 대상이 되었음.
 -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국가전략 목표인 ‘강력한 국가의 재건’이 이상적인 정치적 슬로건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됨.

나. 문제점

- 금번 러시아 대선의 문제점은 선거의 불공정성과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임.
- 푸틴 대통령은 금번 대선에서 70% 이상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고 자신의 개혁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선거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선거의 불공정성은 러시아에서 선거민주주의 정치문화의 미정착과 투표율의 과반수 미달에 의한 선거연기 가능성에 대한 푸틴 대통령 진영의 우려 등에 기인했던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몇 년 동안 크렘플린은 국가의 주요한 TV망 등 언론매체에 대해 많은 통제를 해 왔음.
 - 국제 옵저버(observer)들은 지난 국가두마 선거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러시아내 진보적 정치인들은 의회선거 3개월 만에 실시되는 대선의 보이콧을 주장하여 왔음.
 - 대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경쟁자 글라지예프, 하리토노프, 하카마다는 공동으로 선거감시센터를 설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유권자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투표조작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표된 투표용지 사용, 학생과 군인들에 대한 투표 압력 등 푸틴 대통령에 유리하게 투표조작이 이루어짐.
 - 국립항공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로부터 추방된다는 위협을 받음.

- 대선 직후 「공산당」은 선거기간의 불법적 행동을 문제 삼기 위해 자료 수집 중이고, 「자민당」의 지리노프스키 당수는 「중앙선거위원회」의 노골적 개입에 항의하며 폐지를 요구함.
- 서방 감시기구들과 미국도 러시아 대선의 불공정성을 비난하였음.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서방 감시기구들은 「중앙선거위원회」가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했고 푸틴 대통령의 경쟁자들에게 충분한 TV 유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힘.
 - 따라서 러시아 제4대 대통령 선거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함.
 - 미국의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과 라이스(Condoleezza Rice) 안보보좌관도 미디어 통제로 인해 푸틴 대통령의 경쟁자들이 공평한 언론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함.
- 또한 푸틴 대통령이 권위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법의 독재’를 내세운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자유언론과 야당 지도자, 인권단체 등을 박해한다는 시비를 낳음.
 - 군과 보안기관 출신 인사가 정부와 의회의 25%를 점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2003년 미국의 Freedom House 보고서는 제4대 국가두마 선거 이후 러시아가 더 이상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국가가 아니며 푸틴 대통령과 정부가 권위주의로 더 나아갔다고 밝혔음.
 - 파월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강경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 사회로 회귀되고 있는 권위주의에 우려를 표시함.

- 미국은 러시아인들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Ⅲ. 푸틴 집권 2기의 대내외정책 전망

1. 대내정책 전망

- 정치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건설이라는 기존의 국정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더욱 강력한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 푸틴 대통령은 재선직후 “향후 4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라고 말함.
 - 국가두마에서 친여개혁 세력의 과반수 이상 의석 확보와 대선 직전 신내각 구성으로 그의 국정장악력은 이미 강화되었음.

- 대선 직전 부총리와 장관직을 대폭 축소할 점을 고려할 때, 푸틴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구조조정과 함께 관료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작년 국가두마 선거와 금번 대선 과정을 통해 언론통제에 대한 비판과 권위주의로의 회귀 우려 등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푸틴 대통령은 자유언론 보장과 민주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약속을 통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려 할 것임.

- 그러나 관료들의 부정부패, 군개혁, 체첸 분쟁 등의 문제들은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구소련시대 이래 장기간 만연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완전 척결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님.

- 정부의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군개혁은 실패했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급자의 학대는 계속되고 있음.
 - 체첸과의 분쟁 및 체첸인들의 대러시아 테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경제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선 직전의 개각에서 통상장관 및 주EU 대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 프라드코프가 총리로 발탁되었고, 푸틴 대통령 1기 경제개혁의 기수인 시장경제주의자 그레프(German Gref) 경제개발·통상장관과 쿠드린(Alexei Kudrin)재무장관이 재임됨.
- 국영기업의 민영화 촉진, 금융제도의 개선, 건설부문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
- 거대 국영전력회사 ‘통합에너지시스템’(UES)과 국영가스사 ‘가스프롬’의 민영화가 촉진될 것임.
 - 초보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금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약 8%에 달하는 실업률 축소를 위해 고용효과가 큰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결과,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4년 4.5%, 2005년 4.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경제 분야에서의 문제점은 에너지 자원 수출에 너무 의존적인 경제발전, 계층 및 지역간 빈부격차의 심화 등임.
- 러시아의 2003년 원유와 가스 수출액은 GDP의 20%, 총 수출액의

- 50~60%, 재정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가격 하락 시 1998년과 같은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음.
- 1억 4,500만 인구 중 1/5이 빈곤층인 가운데 빈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는 정부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대외정책 전망

- 대외정책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강국 러시아’ 건설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푸틴 대통령은 대선 직후 “러시아 외교정책의 목표는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음(3. 15).
 -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존중에 기초된 다극적(multipolar)이고 다변적(multilateral)인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장할 것임.
 - 세계경제체제로의 완전한 편입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 대미관계에서 러시아는 범세계적 문제들에 협력을 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및 중국과 함께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대량살상무기, 국제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 지역분쟁 등 범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
 -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협력하면서 견제하려 할 것임.

- 신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러시아가 초강국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임을 고려할 때, 미·러 관계는 NATO와 EU 확대 등의 문제로 푸틴 집권 1기 때보다 갈등면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큼.
 - 러시아는 NATO나 EU의 영향력이 구소련공화국까지 미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러시아의 대미 외교기조는 비대결적 관계 유지임.

- 동북아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영향력 회복과 경제실익 확보를 위한 실용주의적 정책들을 계속 수행할 것임.
 -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체결한 「선린우호협력조약」(2001. 7. 16)을 기초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무기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경제실익 확보 차원에서 역내국가들과의 경협, 특히 에너지·철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획득된 미·중·일과의 동등한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고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를 지속할 것임.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견지함.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판매 등 적극적 실리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큼.

- 러시아의 대한국정책은 경제면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치, 안보·군사 면에서 한·러 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은 거의 없음.
-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라서 한·러 교역은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시베리아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IV. 정책적 고려사항

- 한·소 수교 이후 10여 년이 지났고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러 양국관계의 기본개념을 새로이 설정함.
 - 양국관계는 그동안 ‘선린·신뢰·협력의 관계’(『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1990. 12) → ‘우호협력관계’(『한·러 기본관계조약』, 1992. 11) →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한·러 공동선언』, 1994. 6)로 발전되어 왔음.
 - 중·러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고려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 사이의 개념으로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and mutual beneficial partnership)를 러시아측에 제안함.

- 푸틴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국이 안정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한·러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도록 함.
 -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 집권 1기 동안 달성된 개혁성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양국간에 한·러 관계의 새로운 개념이 합의되면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나 공동성명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발표 함.

- 우리 정부가 미·중·일 정부와 행하고 있는 수준의 고위인사 교류를 러시아 정부와도 유지하도록 함.
 - 통일부에서 주미·주중·주일 대사관에 파견하고 있는 통일연구관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바, 주러 대사관에도 통일연구관을 파견하도록 함.

-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북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타 역내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 사전협의하거나 사후 즉시통보 함.
- 한·소 수교 이후 양국이 합의했으나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여러 가지 경협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함.
 -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단기, 중기, 장기 전략과제로 구분함.
 - 같은 기간의 전략과제인 경우, 재정부담이 적은 사업부터 실천하도록 함.
 - 나훗카 공단설치 문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사업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러 투자와 교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러 투자액은 약 3억 5천만 달러(2003. 6 현재)로써 대중 투자의 3%에 불과함.
 - 한·러간 교역액(2002년)은 33억 달러로써 한·중 교역액의 8%임.
- 남북한과 러시아 3국 모두가 큰 이해를 갖고 있는 TSR-TKR 연결 사업의 최대 장애는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인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함.
 - 북한의 지하자원에 이해를 갖고 있는 독일, 영국, 스웨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학자와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확대
하고 러시아내 문화재 복원을 위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들의 재정지원을 유도함.